



광주 도심 맞아? ...울창한 중외공원 생태숲길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에 따라 광주시가 도심공원 일부를 민간사업자에 의해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광주전남녹색연합회원들이 보존 여론(광주일보 21일자 1면)이 강하게 일고 있는 북구 중외공원의 생태숲길을 탐방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 시도지사 첫 회동

전남도 "주민의견 우선...조정 역할"

도의회는 반대특위 연장

광주 군 공항 이전지로 전남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지역주민 의견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지역주민들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실익을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조정자의 역할에도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윤장현 광주시장,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 등 양 시·도 간부들이 21일 만찬 회동을 하기로 해 이 자리에서 해묵은 현안인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양 시·도의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가운데 이전 후보지로 꼽힌 지역의 도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정영덕 전남도의회는 21일 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광주시는 일반통행식 행정을 중단하고 전남도와 협의해 이전 후보지를 공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이어 중간 용역 결과 이전 후보지 무안, 영암, 해남 2곳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달 설명회를 열 방침이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해당 지역 도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설명회 개최 등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 절차에 대해서는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이전 예정지가 결정돼 국방부가 이전 작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광주시와 지역주민 간 조율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운 시장과 김 권한대행의 만남은 상견례 자리로, 별다른 안건을 정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며 "군 공항 문제에 있어서 전남도는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사드 환경영향평가, 배치 번복 아니다 조건 맞으면 방북...日 위안부 사과해야"

문 대통령 WP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연기 논란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의 필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우리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조건들이 맞는다면 나는 여전히 좋은 생각이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 과정을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날의 경험을 되돌아보더라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때 남북관계도

훨씬 평화로웠고 미국과 북한관계도 훨씬 부딪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오판이라는 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고 발전을 돕겠다는 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협상 의지를 밝히면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직매장 전성시대... '로컬푸드 전쟁'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지자체가 직접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을 열고 무인 판매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로컬푸드가 진화하고 있다. 곳곳에 직매장이 문을 열고, 대형 유통업체들도 로컬푸드 판매를 시작하면서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등 '로컬푸드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 남구청은 21일 진월국제테니스장 옥외주차장 부지에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었다. 이 직매장은 연면적 989.4㎡, 지상 2층 규모이며 1층은 로컬푸드·사

농협에 지자체·대기업 가서
광주 남구 직영점 문 열어
광주·전남 30여곳 성업 중
기존상권과 마찰 등 부작용도

회적 경제 생산품·지역 특산물·신선 및 가공식품 판매장, 학교급식 저온 저장시설, 소포장실 등으로 꾸렸다. 2층에는 지역경제순환센터 사무실, 대화의실, 세미나실, 옥외 정원 등이 들어섰다.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판매한다는 로컬푸드라는 개념에 맞게 이곳에서는 남구 대촌동, 나주·화순지역 농가 300여 곳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축산물·가공품 445종을 판매하게 된다. 이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임시 운영한 결과, 신선한 농수산물을 판

매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광주시 동구 학동 아이파크 아파트 상가에 문을 연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영수) 로컬푸드 직매장도 밀려드는 주부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처럼 광주시 등지에서 최근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고 있는 것은 고공물가 속에서 유통 구조를 줄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들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21일 전남도와 농협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에는 30여 곳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업 중이다. 또 광주 평동농협은 광산구청과 수완주민센터, 지하철 평동역, 신창동주민센터 등 7곳에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도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만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100곳을 돌파했다. 2020년에는 직매장수를 2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기업도 로컬푸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광주시는 호남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호남물산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이마트도 호남에서 생산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국산의 힘'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대기업마저 시장에 뛰어들면서 광주지역 한 로컬푸드의 하루 매출은 10만원에 그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농협 한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 직매장 오픈을 앞두고 기존 상권과 마찰을 빚기도 했고,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농가의 수가 부족해 가공품 판매에 의존하는 직매장도 있다"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늘리기보다는 농수산물 유통 과정을 줄여 가격을 낮추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가톨릭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신동업, 라미란은 NK뷰키트로 체크합니다

우리나이엔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화
문의 : 080-340-2222 www.nkvue.com